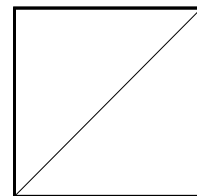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206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7. 20. (제 14 차)	

키움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2. 7. 20.

1. 의결주문

키움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키움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 미신청’, ‘미승인 소유 한도 초과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위반’에 대하여 키움증권(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 미신청’에 대하여는 관련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를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붙임)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1항 제1호, 제4항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제1항, 제2항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5조(권한의 위탁)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제1항 제22호, 제23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승인기준 등) 제3항 제4호, 제4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권한의 위탁)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제1항 제5호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다. 관계부서 협의

-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2022.6.9.) 심의필
- 제13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2.7.4.) 심의필

<별지>

키움증권(주)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16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 미신청, 미승인 소유한도 초과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위반
- 법적근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4조의2 제2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호, 제4항

☐ 직원에 대한 조치

○ ○○○○○ ○○○에 대하여 “주의”로 조치

- 조치사유 :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 미신청
- 법적근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제4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호, 제4항

2. 조치사유

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 미신청

- 투자매매업자가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
총회일 전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출자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도
- 키움증권은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20xx.x.xx. (주)◇◇◇◇◇
◇◇◇◇◇◇◇◇◇◇◇◇◇◇◇◇◇◇◇◇◇◇◇◇◇◇◇◇(이하 '출자대상회사')의 주식
▲▲만주(△△%)를 인수함으로써 금융감독원에 사후 출자승인 신청
대상에 해당되었으나, 인수이후 최초로 소집된 출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20xx.x.x.) 전일까지 출자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음

※ 키움증권은 20xx.xx.xx. 출자승인 신청하여 20xx.x.xx. 금융위원회 승인

나. 미승인 소유한도 초과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위반

- ☐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 ☒ 키움증권은 20xx.x.x. 개최된 (주)◇◇◇◇◇◇◇◇◇◇◇◇◇◇◇◇
◇◇◇◇◇◇◇◇◇◇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의안(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

* 20xx.x.x. 키움증권은 출자대상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 ▲▲만주(지분율 △△%) 보유

(붙임)

관계 법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제24조의2(시정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 ②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제24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5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과태료)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기준 등) ③ 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5.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 안에서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④ 법 제24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 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6조의2(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5항 및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3. 법 제24조 제6항에 따른 승인요건의 심사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 중 관련 서류의 검토 등 심사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거나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이사·감사와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에 대하여는 임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준용하여 제재양정을 결정하며,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53	02-3145-7016